1일 Market Index

코스피 3089.65 (+17.95)	코스닥 783.67 (+2.17)
금리(국고채 3년) 2.454 (+0.002)	환율(원·달러) 1354.00 (+4.00)

metro® 경제

태광산업
화장품·에너지 등
미래먹거리 1.5조 투자
02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0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5년 7월 2일 수요일

롯데지주 재무구조 개선 박차 시장 우려 털어낼까 관심 집중

롯데케미칼 부진에 지주사 타격
신평사들 일제히 신용등급 하향
비주력 자산 매각·구조조정 가속
계획 차질 땐 재무부담 가중 우려

롯데케미칼의 실적 부진 영향으로 롯데지주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지난해 장기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변경된 것과 동시에 롯데지주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행보에 착수한 상황이라, 시장의 관심은 리스크 요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느냐에 모아지고 있다. .

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롯데지주 신용등급을 하향 조치했다.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는 일제히 롯데지주 무보증 사채 등급을 AA-에서 A+로, 기업어음 등급을 A1에서 A2+로 조정했다.

신용도 하락의 주된 배경은 롯데케미칼의 실적 부진이다. 한국신용평가는 롯데지주 신용등급 평가 리포트를 통해 "핵심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이 AA에서 AA-로 변경됨에 따라, 롯데지주 무보증 사채 신용등급 및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롯데지주의 신용등급은 롯데케미칼과 롯데쇼핑, 롯데웰푸드, 롯데칠성 등 4개 자회사의 신용등급 결합 가중치를 바탕으로 산출된다. 주력 자회사인 롯데케미칼이 중국발 석유화학 공급과잉 기조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내자, 롯데지주까지 그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롯데타워 전경 사진 /뉴시스

실제 연결기준 롯데케미칼은 2022년 마이너스(-) 7626억원, 2023년 -3477억원, 2024년 -8941억원, 2025년 3월 -126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기조를 이어 오고 있다. 이에 지난 30일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롯데케미칼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낮췄다.

이미 지난해 6월 국내 신용평가사들에 의해 롯데지주 장기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변경됐고, 지주사 역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나서고 있는 만큼 시장 파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롯데지주는 재무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룹사별로는 지난해 롯데렌탈을 매각하고, 롯데케미칼의 경우 파키스탄과 인도네시아 자회사 지분을 매각했다. 유통 부문에서는 코리아세븐의 현금입출금기(ATM) 사업을 떼어내면서 약 1년 만에 대거 비주력 사업 정리에 나섰다.

또, 가장 최근인 지난달에는 자사주 524만 5461주를 롯데물산에 매각하면서 약 1448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 롯데지주는 지난해 3월 사업보고서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 및 신규투자 사업을 목적으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발행주식 총수 약 15% 내외의 자기주식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롯데지주가 비핵심 사업 구조 개편 및 보유자산 매각으로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자체 재무부담 확대 위험이 아직 존재한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신용평가 관계자는 "보유자산 매각 및 사업구조 개편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시 자체 재무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보유자산 매각 계획 성과 및 추가적인 계열 지원부담 수준, 지주사 재무부담 변동 추이 등이 주된 모니터링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6월 수출 598억 달러, 4.3%↑ 반도체 역대 최대 150억 달러

미국의 통상압박과 글로벌 경기 둔화, 유가 하락 등 복합 악재 속에서도 지난달 수출이 전년대비 4.3% 증가하며 플러스로 반등했다. 특히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를 경신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다만, 미국의 관세 부과조치가 이어지며 올해 6월까지 누적 수출은 전년 동기 수준을 넘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6월 및 상반기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6월 수출은 598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하며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다. 상반기 전체 수출은 3347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03% 소폭 감소했다. 〈관련기사 3면〉

올해 수출을 이끈 건 반도체였다. 6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한 149억7000만달러를 기록, 단일 월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상반기 누적 반도체 수출도 733억달러로, 역대 상반기 중 가장 높았다.

특히 고부가 메모리반도체인 DDR5와 HBM 수요 확대, 제품 가격 상승 등이 반도체 수출 확대를 견인했다. 실제로 DDR5(16Gb) 고정가격은 1월 3.75달러에서 6월 5.10달러로 올랐다.

양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는 미국의 품목관세 25% 부과 등에도 선전했다는 평가다. 6월 자동차 수출은 63억달러로 2.3% 증가하며 역대 6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2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미국 관세 영향에도 핵심 주력 상품인 반도체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자동차 수출도 6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전체 수출 실적을 끌어 올렸다. 1일 경기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 /뉴시스

건설경기 침체, 성장률 0.4%p 끌어내릴 듯

상반기 건설투자 11% 급감
하반기 반등 기대감도 약화

건설경기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제성장률을 끌어 내릴 것으로 추정됐다. 이미 상반기 건설경기 침체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일 정도로 심각한 데다 하반기에도 전망이 밝지 않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수정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건설투자는 상반기 -11.3%, 하반기 -1.1%로 연간 6.1% 감소할 전망이다. 그간 착공 위축이 누적된 여파가 이어지고 있고, 분양 실적이 급감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감소폭으로 보면 상반기 뿐만 아니라 연간 전망 기준으로도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최악이다.

1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투자 전망치는 3개월 전과 비교하면 3.3%포인트(p) 하향 조정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0.4%p 이상 끌어 내릴 것으로 추정됐다.

공사비 부담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다.

상반기에 나온 지표로 보면 경설경기 침체는 예상보다 심각하다. 민간 건축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공공 중심의 토목경기마저 위축됐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당초 민간 중심의 건축경기 부진은 예상됐지만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등에 따라 공공물량이 전체 건설경기 부진의 일부를 상쇄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며 "실제로는 올해 4월까지 공공과 민간, 토목과 건축 전 부문에서 큰 폭의 감소세를 시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동성이 크지 않은 건설기성마저 올해 들어 4월까지 21% 급감했다. 감소폭으로 보면 1998년 3분기 이후 최대치다. 건설기성은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실적을 보여주는 지표다. 건설기업의 단기 실적 악화는 물론 고용 감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건설수주와 건축허가 및 착공 모두 줄었다. 건축허가와 착공이 올해 4월까지 누적으로 전년 대비 각각 21.4%, 22.5% 감소해 건설경기 회복세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안상미 기자 smahn1@

與 "3일 처리" vs 野 "3%룰 불수용"

'상법개정' 협상 들어가는 與野
국민의힘 '일부만 수용' 분위기

상법개정안을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꿔 협상을 제안하면서, 여야 간 협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종료 전인 오는 3일 상법개정안을 처리하는 게 목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을 일부만 수용하자는 분위기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개정과 관련해 "송언석 대표께서 상법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세제개혁 패키지 논의 단서를 달았다"며 "저희는 시간끌기용이 아닌가 의심된다.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7월3일 총리 인준안을 처리하고 상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추경안도 일단 처리를 목표로 하되 혹시 좀 미뤄지면 4일에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법개정안 원안이 대선 전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폐기되면서, 민주당이 재발의한 상법개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5일 ▲감사위원·감사 선출 시 지배주주 의결권 3%로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메트로 한줄뉴스

▲국힘, 새 비대위에 빨라진 전대 시계… 김 '잠행' 나 '농성' 안 '투어' 한 '라방'
▲與 박선원 "尹정부 방첩사, 기무사 회귀시도… 내란 위한 사전작업" /사진 뉴시스
▲행안위 소위, '13조 소비쿠폰' 추경안 여야 합의로 통과… 전액 국비로
▲경실련 "21대 대선 개발공약 예산·실현성 미지수… 공약 재탕 만연"
▲국회 복지위, '전공의 지원' 예산 248억 복원한 추경안 의결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서 "대통령 몫 방통위원 지명해달라" 요청